

교무 · 학사의 현안과 대학의 미래

경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김창원



1. 2014년의 대학과 그 미래

2014년 대학 사회의 최대 이슈는 대학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대학의 외형과 내용 양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둘 다 교무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조개혁의 압력에 대중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교무 분야의 이슈를 진단, 분석하고 향후의 전개에 대해 전망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구조개혁의 출발점은 학령 인구 감소와 그 짝이 되는 대학의 공급 과잉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63만여 명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2030년에 40만 명 선으로 떨어지게 된다. 한쪽에서는 대학 자체의 입학 정원 조정 추이를 들어 교육부의 인위적 정원 감축을 비판하기도 하나, 그래도 향후 20년 내에 대학 지원자가 20만 명 이상 줄어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가의 규모로 볼 때 432개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분명 공급 과잉이다.

대학 교육에 관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가 외형적인 문제라면 대학 교육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은 내용에 관한 문제다. 많은 미래학자가 대학의 쇠퇴를 점치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대학이 지식의 산실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공급하지도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칸 아카데미’나 개방대학 같은 대체교육 시스템도 대학의 위축을 부채질하며, ‘NHN NEXT’처럼 기업이 전문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겠다고 나선 케이스도 있다. 이 추세라면 대학 생태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 연구 기능은 몇몇 대형 대학들에만 남고 나머지 군소 대학들은 취업 준비 학교로 고착되거나 생존 경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정부에 의존하거나 기업과 거래하거나 학력을 볼모 삼아 상아탑을 사수하는 전략은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늘 사회와 애증의 관계에 있었고, 그 거리 조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왔다. 한 세대 안에 다시 한 번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의 대학은 지금과 사뭇 다를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교무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교무 분야의 점검 사항

교수에 대한 인식 변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교수에 대한 막연한 질서와 적대감이 퍼져 있다. 교수의 책무라는 교육·연구·봉사와 묶어 보면, 일주일엔 하루 이틀 나가서 현실과 동떨어진 강의만 하는 교육, 1년에 논문을 1편도 안 쓰는 연구, 그래서 남는 시간에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는 봉사가 교수에 대한 이미지다. 교수가 되기 위해 들인 10년 넘는 투자나 열악한 처우, 과도한 스트레스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년이 65세인 것을 보느라 인문학 초임 교수의 평균 연령이 44세인 것(교수신문, 2012. 4. 23)도 보지 않는다. 분명히 교수는 존경의 대상에서 요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교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만큼 요구도 분명해지고 있다. 사회적 존경이나 자율성은 점점 줄어들고 성과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다.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문제는 ‘채찍과 당근’ 식의 과도한 압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좋은 교수가 되려면 교육·연구·봉사 모두를 다 잘해야 하지만 알다시피 교수는 외골수들이지 팔방미인이 아니다. 연구 트랙과 교육 트랙으로 교수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회에서 교육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대다수의 교수는 ‘교육자’가 아닌 ‘연구자’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다. 따라서 성과중심주의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연구자와 교육자 사이에서 정체성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일이 교무처의 일이 된다.

교수의 직업 안정성

교수의 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지위보다 한참 낮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교수 월급으로는 자기 자식을 대학에 못 보낸다.”는 말이 있겠는가. 특히 국립대학과 중소 사립대학에서 급여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립대학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2013년에 직원에 대한 기성회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면서 많은 국립대학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만일 그와 유사한 논리로 교수에 대한 정액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100% 성과급 개념으로 바꾼다면 이번에는 교수의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에 대한 냉소적·자조적 시각이 변질 것이다. “당신이 선택했고, 당신 아니라도 지원자가 많다.”고 말하면 안 된다. 문제는 지원자의 질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제도적 답이라면 그 내용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퇴직 후도 생각해 보자. 퇴직 교수 중 상당수는 명예교수가 된다. 대학마다 명예교수에 대한 처우가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명예교수는 모든 현역 교수들의 미래다. 65세까지 잘 강의하고 연구하던 분이 66세 때 갑자기 못하게 된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퇴각은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대학은 그 퇴각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퇴직 이후가 안전해야만 현역들이 안심하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 사이버 교수공제회가 통할 수 있었던 것도 교수들의 이러한 심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강의 배정, 공동 연구실 제공, 학교 행정 참여 등 명예교수가 지닌 전문성과 경험을 부작용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교수의 직업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역량도 높이는 방안이다. 명예교수가 담당한 강의의 일정 비율을 전임교수 강의로 인정해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수의 자격과 평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넓은 의미의 교사 중 유일하게 자격증이 필요 없는 교사가 대학 교수다. 전공 분야의 학위나 경력만 있으면 교육에 대한 소양이 없어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후에 비로소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대학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있어도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는 적으며, 교수법에 관해 자기 계발을 하는 교수도 적다. 고3 때 고도로 숙련된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대학의 교·강사에게 실망하는 이유도 태반이 교수법 문제다. 신규 임용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교수’ 자질을 평가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교수 평가는 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로 인해 많은 교수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심하면 건강을 해치기까지 한다. 농반진반으로 지금보다 수업을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논문을 조금만 더 많이 쓰며 조금만 더 자주 봉사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다. 그 ‘조금’을 두고 경쟁하며 정부와 학교 당국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것이 작금의 교수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 대학 교수들에게 지금의 평가 기준은 겨우 돈 만 원과 주머니칼 하나를 주고 50인용 만찬을 차리라는 요구와 같다. 평가 기준이 너무 많고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 특화가 안 돼 있는 것이다. 교무처는 이런저런 요구를 정리해서 개별 교수의 역량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학과 교수가 함께 발전하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수에 대한 규제

최근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교육부에서도 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2013.3.23). 대학과 관련된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연구비 집행과 특허 관련 규제이지만 그것은 기획·연구 분야의 글로 넘기고, 여기서는 복무 관련 규제만 언급하기로 한다. 교수들의 복무와 관련해서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의 규정을, 국립대학은 안전행정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쉽게 말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교수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국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 중 운동이나 외출은 안 되며, 외부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출장을 달고 가야 한다. 교수가 강의만 달랑 하고 학교를 온통 비우는 것도 문제지만 교수를 9급 행정직 다루듯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밤낮없이, 주말에도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는 교수에게 ‘근무 시간’이나 ‘근무지’ 같은 개념이 어디 있는가? 학생 지도를 포함한 교육과 연구의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교수에게 복무와 관련한 규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굳이 규제가 필요하다면 교수의 직무에 특화된 규제를 따로 정하면 된다.

시간강사와 조교의 문제

대학 교육의 절반을 시간강사가 담당한다. 하지만 강사의 직업 안정성 및 교육·연구 여건은 터무니없이 낮고 열악하다. 2013년 말 이른바 ‘시간강사법’이라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하였지만, 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로 인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근본적으로, 시간강사 문제 역시 교수 인력의 수요-공급 미스 매치에 그 원인이 있다. 김영삼 정권 이후 대학원 정원을 비정상적으로 늘려 놓은 데다 유학 자율화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 수많은 고학력 실업자를 낳은 것이다. 대학 정원은 줄어드는데 박사는 늘어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시간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학 이외에 박사급의 인력이 갈 만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대학원 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

한편, 교수·강사·직원의 중간 지대에 조교가 존재한다. 조교는 학과 단위의 행정을 책임지는 동시에 교수의 교육과 연구를 보조하고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조교는 교원도 직원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으로서 신분 불안정에 떨고 있다. 그나마 연구 조교는 대체로 대학원생이 겸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는 편이지만 순수한 행정 조교는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면서 허울만 좋은 ‘전문 조교’로서 대학 행정의 말단을 지탱한다. 교수라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조교가 잘해야 학과가 잘 돌아간다. 따라서 조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령이 나와야 한다.

3. 학사 분야의 점검 사항

대학 체제의 변화와 교육

대학구조개혁은 정원 조정과 함께 대학 체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대학특성화사업과 관련하여 학과의 개폐나 통합·분리, 명칭 변경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감안하여 조직 개편을 요구하지만, 단위 대학은 대학의 역사, 구성원의 이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과연 수요가 적은 소규모 학과는 통폐합하는 것이 맞는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자유전공이 융·복합의 시대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교육 기간의 연장 추세에 맞춰 학·석사 연계 과정이나 3년·5년·6년제 같은 변형 학제의 확대가 필요한가?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동일 지역의 대학간 분업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의 내적 체제뿐 아니라 대학 밖의 새로운 제도도 교육 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적인 대학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있다. Khan Academy, TED와 같은 새로운 형식뿐 아니라 MIT Open Courseware나 서울대의 SNUON처럼 대학 스스로 강의를 외부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평생교육의 수요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되고 있다. 나아가,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도 점증하여 한국의 대학 생태계는 더 이상 폐쇄적인 리그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적용하면 할수록 기존의 대학 교육 개념은 해체된다는 점이다. 어쩌면 연구실과 강의실, 실험실, 도서관, 기숙사 등으로 이루어진 캠퍼스 자체도 변화할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과와 교육과정, 교육 시스템이 태어날 것이다.

교육의 초점과 질 관리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대학 교육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질문을 낳는다. 취업만을 놓고 보면 대학은 과거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며(요즘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공교롭게도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과 키워드가 같다), 인문학과 예술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취업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 당연히, 교육과정 역시 취업에 유리하도록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의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직업대학화할 것인가? 이 문제는 대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문제다. 폭넓은 학문 배경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추세를 볼 때 사실상 교양대학의 이상은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사례로 교육 인증제를 들 수 있다. 공학교육인증제를 필두로 해서 교육 인증제는 점점 확대될 전망이며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인증’ 하나에 매달리면서 생기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인성과 교양교육의 위축이다. 전공별 인증제도에 이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를 흔들었던 의대생의 동료 성추행이나 성추문 검사, 해

결사 검사 등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대학이 ‘전공 지식만 뛰어난’ 괴물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교원 자격증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교직인적성검사와 비슷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그밖에 여러 영역에 관해 다양한 형태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과 윤리

대학 교육에서 인성이 문제가 되면서 자주 거론되는 화두가 교육 윤리 문제이다.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서는 2013년 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합의가 이루어져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나, 차후 언제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개별 대학 단위의 약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수업 및 평가 자료가 유통되면서(상업적인 전문 사이트도 많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발표나 과제에 대한 질 평가보다 표절 여부 판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사도 검색 시스템의 활용에도 제한이 있다 보니 최종 평정은 그야말로 지필 시험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강의 윤리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수업’을 보장할 장치와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 윤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연구 윤리가 주로 표절, 허위 자료, 성과 가로채기 등을 문제 삼았다면 최근에는 연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약 계열의 임상시험뿐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모든 연구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가 필수화되면서 설문조사나 관찰, 면담 등에 의존하는 사회과학 분야 연구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문학 연구에서 작가를 쓰면서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연구 의욕을 진작할 수 있는 연구 윤리의 확립 · 교육과 함께 IRB 운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졌다.

IT 확산의 문제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학도 빠르게 IT 기반으로 옮겨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꼭 구축해야 할 시스템이 전국을 커버하는 온라인 도서관이다. 널리 알려진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나 지식 프로젝트에서 구글과 아마존의 야심찬 전자 도서관 계획까지, 대중매체 · 학술 저널뿐 아니라 학위논문, 단행본, 각종 카탈로그 등이 모두 디지털로 제작되거나 변환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보유 · 구축하는 전자 자료가 다르고 DB가 중복되거나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도서관간 자료 교류 협정을 확대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대학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모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대학이 보유한 콘텐츠의 보안에 관한 문제다. 대학 콘텐츠는 수많은 연구 성과, 강의 자료,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의 학적 데이터, 그와 연동된 병무청이나 각종 기관의 데이터, 교직원 의 개인 정보 등 종류도 많고 양도 많다. 그중에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거나 유출될 경우 대학과 개인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도 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대학의 보안 수준은 낮은 편이어서, 서버는 불

이슈진단 및 분석

안정하고 많은 취약하다. 당장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고 대학 평가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는 늘 후순위로 밀린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이나 통신사에서 터진 정보 유출과 유사한 사고가 대학에서 터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 결과는 기업의 정보 유출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질 것이다.

기왕 IT 얘기가 나온 김에 전자 교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안 교단 선진화의 모토 아래 전자 교탁·전자 칠판·빔 프로젝터·전동 스크린·자동 출결 시스템 등을 설비하는 데 대학이 큰 투자를 했고, 이제 대부분의 교실은 전자화되었다. 수업 중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는 교수가 드물어진 것도 근래의 일이다. 하지만 딱 그만큼이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수업하고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찾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전자 교실 설비는 과잉 투자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초기 구입 비용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더더욱 그렇다. 기기의 내구 연한과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전자 교실 구축은 적절치 않으며, 가장 단순한 기능 - 몇 개의 교육용 프로그램 활용, 빔 프로젝터 이용, 인터넷 연결 등으로 최적화된 표준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지금보다 반 이하의 비용으로 전자 교실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일은 교육부나 KERIS 등에서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학제와 대학간 교류

학사 분야에서 자주 불거지는 문제가 학사 일정이다. 3월에 시작하는 한국의 대학 시스템은 가까운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서구 및 중국 등과 학기가 다르고 방학 기간도 다르다. 그에 따라 유학, 학생 교류, 계절 학기 수강, 교수 초빙 등 여러 분야에서 소소하게 피해가 쌓이고 있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학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이 모두 관련 되는 문제로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3월~이듬해 2월'에서 '1월~12월'로 바꾼 과정을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조기 졸업, 유급, 5년제 중·고교 통합 학교 등 학제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해외 대학과의 교류보다 전·편입학이나 학점 인정·교환 학기 등 국내 대학간 교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온라인 대학과의 교류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대학간 교류는 소규모의 학점 인정에 머물고, 대다수의 대학은 외국과의 교류에 공을 더 들이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 서열에 대한 고정관념과 타 대학 수업에 대한 불신, 그리고 편입이 지방대학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해 있다. 하지만 제도로 묶어 두기에는 대학 과정 이수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너무 크다. 유럽의 예를 참고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다.

4. 대학의 미래를 위한 고민

최근 학부생들은 졸업식에 오지 않는다. 학교에 애정이 없어서, 취업 준비에 치여서, 졸업식 행사

자체가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등,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학생들 스스로 대학 졸업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사회에 던져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commencement’가 ‘졸업식’인 동시에 ‘시작’의 뜻을 지닌다는, 졸업식장에서 자주 듣는 말을 그들은 약간의 공포와 함께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 공포를 성취감과 희망으로 바꾸는 일이 대학의 과제다.

그를 위해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상은 어둡하며,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학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의 대학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누리고 수행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단지 평가를 잘 받는 데에 대학의 역량을 쏟아붓는다면 그 폐해는 금방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적은 비용으로 지표를 올리는 것을 행정 역량으로 인정하는 세태도 오래 가기 힘들다. 한편에서는 교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르고 그들의 교육·연구 역량을 최대한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다른 한편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바꿀 뿐 아니라 대학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논의의 장에는 정부와 대학뿐 아니라 기업, NGO, 문화·예술 등 사회의 소프트한 분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서비스의 직접 수요자인 청년층이 참여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아마 교무처라는 조직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필자소개

김창원 | 경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1962년 충남 보령 생.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복공고·용산고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싱가포르 NIE 초빙연구원으로 일했고,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국립국어원 연구심의위원, 경인교대 교수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및 교무처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문학교육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관심 분야는 국어과 교육 과정 및 평가, 문학 및 문화 교육, 한국현대사 연구이고, 주요 저서로 『국어교육론-관점과 체제』, 『문학교육론-제도화와 탈제도화』 등이 있다.